

국민적 교육개혁의 필요성

이 현 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는 없으며 21세기의 '세기적 변환'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는 교육개혁이 모든 국가의 세기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5·31 교육개혁안도 이러한 세기적 변화를 준비하는 복안이라 볼 수 있다.

이번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은 종전의 교육개혁안들과는 달리 '열린 교육'을 그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다. 특히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무한정 국제 경쟁 사회의 세계화적 차원에서나 우리나라 교육 내부적으로 누적되어 온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점에서 이번의 교육개혁이 성공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깊이 인식하면서도 보다 알찬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총론적으로는 이론이 없으나

각론 부분을 볼 때 자율을 표방하면서 자율에 상응하는 통제를 상정하고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상충되는 일면이 있고, 의식적 측면은 경시된 반면 제도적 측면만 치중하고 있으며, 교육적 논리보다 시장성 논리에 집착한 나머지 협력과 경쟁의 조화를 근간으로 해야 하는 교육을 경쟁 논리로 집약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싶다. 물론 완전무결한 개혁안은 불가능하겠으나, 세부 개혁안간의 내적 합치도와 제도와 의식 간의 조화 그리고 통일성은 교육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 볼 때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5·31 교육개혁 중 대학 관련 개혁안을 보면 그 기본 방향을 '자율화'와 '특성화' 그리고 '질 관리'에 두고 있으며 세부적인 개혁 내용으로서는 학점은행제, 최소전공학점인정제, 준취주의, 신대학, 임시제도의 보완 등을 담고 있다. 이번 5·31 대학 관련 교육개혁안은 한마

디로 개별 대학들의 자율과 다양화에 따른 열린 대학 교육체제를 병행하겠다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개혁안 중 평생학습체제를 지향하는 개방 체제로의 전환과 이러한 개방 체제를 위한 대학특성화, 학사자율화, 입시지옥의 완화 그리고 설립자율화 등의 발상 전환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대학에 자율을 부여하고 특성화를 유도하며 사용자 중심 학습체제로 전환하려는 원칙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자율화에 따른 사회적 책무성을 진작시키기 위한 질 관리 체제를 설정하는 것은 좋으나, 지나치게 시장 원리와 경쟁 논리에 입각해서 대학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적자생존에 따라 대학간의 발전 전략을 상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교육은 상업적 속성이나 시장 원리보다는 교육적 원리가 필요하며, 단기적이고 급격한 변화보다는 백년대계라는 관점에서의 국민적 합의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원칙적인 발상의 대전환 못지 않게 세부적인 시행 방안과 함께 법 제도적 정비 그리고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지속적인 과제 또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칙론적으로 볼 때 각론에 따른 개혁과 이러한 개혁을 위한 보완 작업에서 필요한 것은 개혁을 위한 '신규제적' 성격의 제도나 법령 그리고 시행 방침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아홉개의 안을 담고 있는 대학과 관련된 주요 교육개혁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점은행제(credit bank system) 도입에 따라 각종 사회교육 기관과 기존의 대학 교육기관에서의 학점 이수, 첨단 정보 통신 매체의 발달에 따라 예상되는 각종 원격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그리고 신대학에 의한 생업 교육 등의 학점을 유기적으로 관리하여 학위 수여에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교육과정

을 누적하여 학위와 연계시켜 개방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학점은행제를 중앙 집중 관리하려는 방안 보다는 질 관리 체제를 전제로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다. 또한 기존의 평가인정체제와 전문협회(professional association) 기관 간의 합리적인 연계도 바람직한 방안이다.

둘째, 최소전공인정학점제의 도입으로 전공 인정 학점을 총 이수 학점의 1/4~1/6 수준으로 대폭 낮춤으로써 사실상 복수전공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러한 최소전공인정학점제의 취지는 다전공 다학문 접근적 변화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하지만 선택 과목의 활성화, 필수 전공과목의 합리적 조정, 전공 영역 교수의 충분한 확보, 학문간·전공영역간 개방 그리고 대학교육의 질 관리가 병행되어야만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보완책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 모형의 다양화와 특성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지금껏 지속적으로 대학 일선에서 주장되어 온 바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규제보다는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대학별로 다양화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율성 부여가 성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학부와 대학원, 특수 목적 대학과 일반 대학, 직업 중심 전문교육과 학문 중심 교육, 단설대학과 대학원대학 등의 신대학 그리고 산학협동 연계 여부 등의 요인들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리라 본다.

넷째, 대학 설립 준칙주의에 의한 대학 설립의 자유화이다. 학교 설립 목적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되, 최소 기준을 법정화 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이다. 대학 설립 자유화의 취지 및 목적은 산업 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위한 고등교육 기관 설립을 유도하고 지역간 고등교육 기회를

균등화하며 대학을 다양화하는 데 있다. 또한 기존 대학에도 적용시켜 학교 현장을 제정하고 이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준칙주의는 대학현장의 토대 위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단순히 훈련기관이나 인력수급적 차원의 자율화를 염두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준칙의 성격 여하에 따라서는 기존의 고등 교육 체제에 커다란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무엇보다 양적 팽창을 유도하려 한다거나 산업 인력 위주의 경제 논리에만 집착해서도 아니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다섯째, 대학 정원 및 학사 운영의 자율화 방안으로서 이는 앞서 제시된 몇 가지 개혁안과 상호 연관되어 있다. 정원이든 학사 운영이든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되리라 본다. 다만 자율은 책무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자율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조성적인 지원책은 물론 제도적인 장치와 함께 질 관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학 자체 관리 체제의 권장이 요청된다.

여섯째, 연구의 세계화와 국제 학술지 발행 지원 등은 세계화를 표방하는 현 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한 방안이다. 외국과의 공동 연구나 국제 학술지 간행 등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먼저 국제교육(international education)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학 구성원들에 대한 국제 감각의 신장과 대학내에 국제교육 관련기구를 설치하는 일 그리고 지역연구 등을 활성화하고 정보망을 구축하는 일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곱째, 대학 입학제도의 개선은 지금껏 시행되어 온 모든 교육개혁안 중에서 우선 과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합생활기록부에 의한 전형 자료의 다양화와 함께 선발 기준과 방식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개선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생활기록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고 교육 문화나 학부모 및 교사의 의식과 관련지어 볼 때 많은

보완 작업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크게는 13번, 세부적으로는 31회나 바뀌어온 제도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입시지옥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근본 원인을 직시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대학평가와 재정 지원의 연계 강화에 대한 방안이다. 가칭 교육과정평가원을 설치하여 교육 수요자의 대학 만족도 조사와 함께 대학이 자체평가를 추진토록 유도한다는 내용으로서 자율을 부여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질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학평가는 비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임을 감안할 때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더구나 대학평가 결과를 재정 지원과 연계시켜 차등 지원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조성적 재정 지원과 '최상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보상적 재정 지원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GNP 대비 5%의 교육예산 확보 방안이다. 교육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한정된 국가 재정을 감안할 때 무한정 교육비를 충당할 수만은 없다. 이 점에서 GNP 대비 5%의 예산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될 수는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자구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대로 교육개혁은 시대적 요구이며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전략이다. 그러므로 이번의 교육개혁은 기필코 성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한 국민적 노력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5·31 교육개혁안은 몇 가지 관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첫째, 지나친 서구적 논리에 치우쳐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외국의 제도나 교육 이상은 그들의 교육적 토양 속에서 배태된 것이므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여 한국적 교육개혁 논리

가 정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이번 교육개혁안이 지나치게 제도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도를 창출하는 것도 인간이요 제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이들도 인간이다. 따라서 제도 개혁과 함께 제도적 개혁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의식적 보완 작업도 요구된다.

셋째, 이번 대학 관련 교육개혁안은 그 근본 철학이 경쟁 논리와 적자생존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경쟁과 협력이 조화될 수 있는 교육적 논리를 정립하기 위한 보완적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이번 교육개혁안은 그 내용 면에서 충분히 정부 주도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교육 개혁을 실천하는 주체는 국민이며 주도 기관 또한 일선 학교와 대학 그리고 교육공동체이다. 따라서 전 국민에게 확산될 수 있는 '국민적 교육개혁' 또는 '국민적 교육혁명'이 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과제로 전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관련 자율협의체에 의한 자율적 개혁 노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율협의체 주도적' 개혁작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은 학부 과정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원 교육에 대한 개혁 노력도 병행되어야만 하고 UR에 대비한 교

육 개방 전략의 차원에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이지만, 미국의 경우 레이건 정부 이래 현재까지 세 번의 교육개혁안이 제시되었다. 관련된 보고서만도 12,000여 개에 이르지만, 15년 동안 지속된 교육개혁이 아직도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교육을 지나친 경제 논리에 의해서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산업인력과 기술 개발 그리고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려는 개혁안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위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국민 모두의 교육적 의식과 자발적 참여가 부족하여 국가가 아직도 준비되어 있지 않기(a-nation-not-prepared) 때문이라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이현청/한양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남일리노이 대학에서 교육과학 석사,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남일리노이 대학과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의 교수를 역임하고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교육사회학』, 『학습하는 사회』, 『교육사회학 이론과 전망』, 『사회교육학 서설』 등이 있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